

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

# 중소 · 벤처기업 현장어로 혁파방안

---

2017. 9. 28.



관계부처 합동

# 목 차

## I 중소기업·벤처기업 규제혁파 체감현황

## II 새정부 규제혁파 추진방향

## III 주요 현장애로 개선과제

1. 진입장벽 해소
2. 기업활동 애로 해소
3. 기술기준 합리화
4.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

# I 중소기업·벤처기업 규제혁파 체감현황

##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혁파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혁파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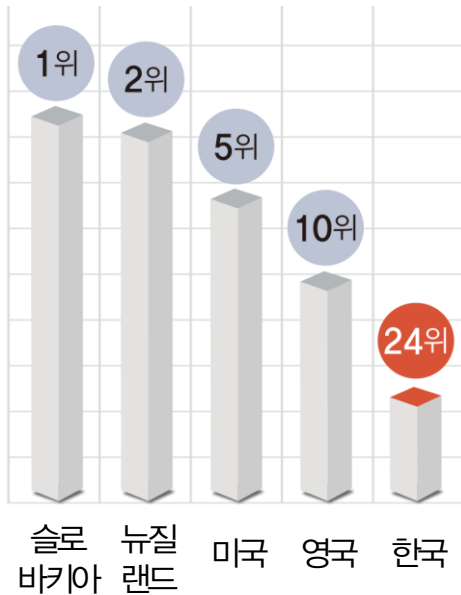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 대부분이 규제혁파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라고 인식, 59%가 규제혁파를 체감하지 못함('15. 2, 중기중앙회)
- ◎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과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고, 규제로 인해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과 애로를 호소
  -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정도('16. 12, 중기중앙회) : 준비를 못하고 있다 94%
  - 신산업 글로벌 경쟁 걸림돌('17. 6, 대한상의) : 규제 75%, 판로 73%, 자금 72%

##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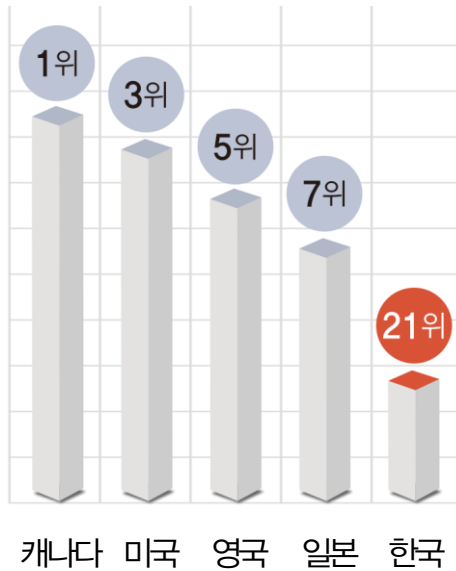
### 주요국 대비 규제 수준이 높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에 한계

우리나라의 중소·벤처기업 규제는  
심각한 상황 ('14. OEC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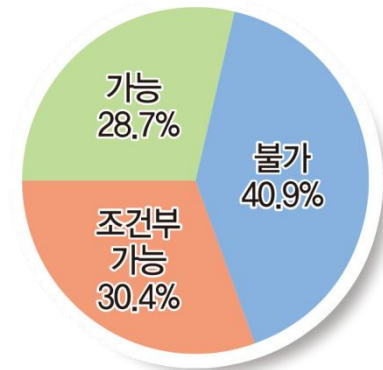
〈기업활동 규제〉



〈법인기업 행정부담〉



전세계 투자유치 상위 100개  
스타트업 중 70%가 국내에서는  
불법('17.7 아산나눔재단)



우버 | 여객자동차  
운수사업법 저촉

에어비앤비 | 숙박업 요건 미충족

## Ⅱ 새정부 규제혁파 추진방향

◎ (새정부)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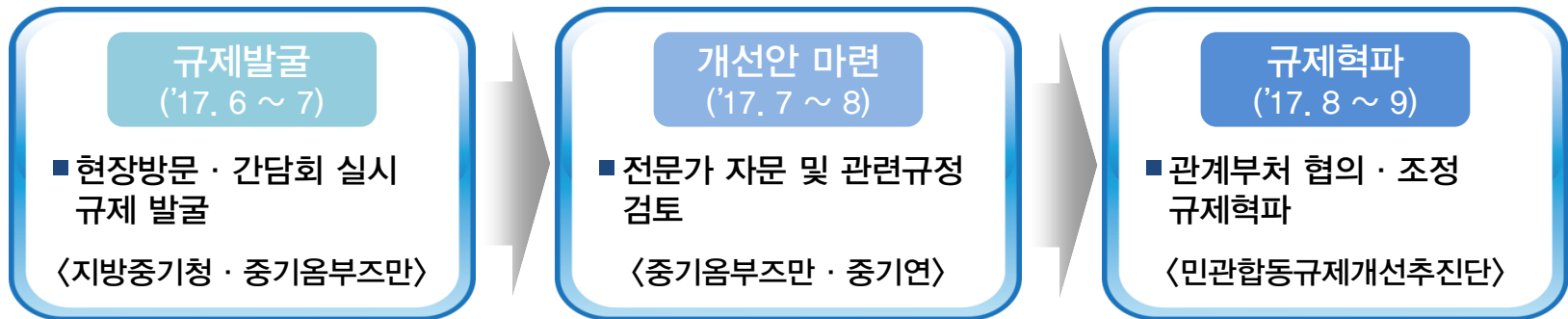
- 신산업 · 신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
-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
- 민생 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

◎ (중소 · 벤처기업) 규제혁파를 포함한 ‘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’ 을  
금년 10월에 발표

-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 정부 역할 재정립
- 투자 · 회수 선순환 생태계 조성
- 기술 · 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
- 원활한 재도전 환경구축

## 규제혁파의 주안점

### 이년에는 새정부 출범 후 기업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과제 중점 발굴 · 혁파



### 향후 12개 지방중기청에 ‘규제신고센터’ 를 설치, 상시 규제발굴 · 혁파

- 중기음부즈만, 각 지역별 TP · 창조혁신센터 등과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
- 건의 받은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해결 ➔ ‘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’ 에서 발표



## Ⅲ 주요 현장애로 개선과제

1. 진입장벽 해소
2. 기업활동 애로 해소
3. 기술기준 합리화
4.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

# 1 진입장벽 해소

창투자  
납입자본금  
요건 완화

현행

창투자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 
50억원 이상

개선

납입자본금 완화

\*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('17. 10)

➔ 소규모 창투자 설립 촉진으로 창업 · 벤처기업 투자확대

연구소기업  
설립주체의  
최소지분율  
완화

현행

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의 최소  
지분율은 20% 이상

개선

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소지분율  
차등적용(10~20% 이상)

\*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('17. 12)

➔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

## 2 기업활동 애로 해소

무급  
가족종사자  
산재보험  
가입 허용

현행

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  
할 수 있으나, 가족종사자는 산재  
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

개선

중소기업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하여  
산재보험 가입 허용

\*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('18. 12)

➔ 중소기업 무급가족종사자(117만명)의 산재보험 가입으로 경제적부담 완화

청년내일  
채움공제  
가입기준  
완화

현행

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은 최저  
임금 110% 이상 또는 월 급여 총액  
150만원 이상

개선

가입요건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 
완화

\*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개정('18. 1)

➔ 특성화고 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성 제고  
→ 소득증대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

### 안전모의 통기구멍 허용

현행

낙하추락방지용 안전모에 통기구멍 불허용

개선

안전모에 통기구멍 허용  
\*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('17. 12)

➔ 건설업체 근로자의 장시간 안전모 착용에 따른 피로도 완화

### R&D사업, 현물 계상기준 개선

현행

R&D사업비 민간부담금 중 연구 시설·장비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%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

개선

현물 계상기준을 “장부가”에서 “구입가”로 개선  
\*R&D 사업 관리지침 개정('17. 12)

➔ R&D참여기업(5.5천개)의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 완화

### 3 기술기준 합리화

####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기준 합리화

현행

건설현장에서는 두께별로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관행

개선

단열재 두께와 관련없이 하나의 시험성적서만 제출

\* 발주청, 시공자, 건설협회 등 업무개선('17. 10)

➔ 불필요한 중복시험 해소에 따른 시험비용 절감

#### 주방용 세척제 제조시설 기준 합리화

현행

주방용 세척제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살균 소독제 생산시설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생산시설이 필요

개선

식품용 기구의 살균 소독제를 주방용 세척제로 제조할 경우 생산시설을 같이 사용 가능

\*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'18. 4)

➔ 살균소독제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(주방용 세척제 시장 진출)

## 4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

○ 행정조사\*는 상당한 기업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으나, 그간 실태 파악 및 정비 미흡

\*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현장조사, 시료채취, 보고, 자료제출 요구 등(27개 부처, 595개 행정조사)

\*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되 ‘행정조사기본법’ 준수

- 조사근거 :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
- 조사원칙 :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대상자 선정 · 실시, 유사 사안 공동조사 등
- 조사절차 : 조사 7일전 사전통지, 조사시 증표제시, 조사경과 서면통보 등

● 기업 행정부담('16. 2 대한상의, 100보다 높으면 부담으로 인식)

– 행정조사 139, 법인세 119, 진입규제 68 순

● 부담수준 : 업체별 연간 451페이지, 900여만원

➔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새정부 규제혁파 과제로 ‘행정조사 정비’ 추진

◎ 국조실과 중소기업연구원, 법제연구원 등 관련기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, 부처·조사별 정비계획을 마련('17. 11)

● 정비방향

-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
- 조사 실적이 없는 행정조사
- 과도한 자료제출
- 부처내·부처간 유사한 행정조사
- 행정조사 법정 절차 미준수
-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사특례 부재



- 근거나 실적이 없는 조사폐지, 조사실시 주기 완화
- 조사내용 간소화·통합, 공동조사
- 요건 명확화, 절차 준수여부 점검
- 조사 차등화, 신설 심사 강화

● 정비효과

- 행정조사 종류·횟수 축소, 예측 가능성 제고, 조사대상자 권익 보호 등
- ➔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·영업 부담 완화



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창업을 손쉽게 하고  
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 
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습니다.